

책임 안지려는 어른... '위험한 실습' 개선 언제쯤

잊지 말고 기억해요

2021년 사건·사고 결산

<3> 고교생 목숨 앓아간 현장실습

여수해양고 학교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은(18)군(광주일보 10월 11일 6면) 이 사고로 숨진 지 2달이 넘었지만 홍군 가족들의 일상에는 홍군의 자리가 여전히 남겨져있다.

홍군 어머니는 매일 아들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놓았다가 세우는 일을 반복한다. 밤이면 홍군 사진을 향해 "잘 자"라고 인사하며 눈물짓다가 아침이면 잠에서 깨우려는 듯 다시 세워 놓는다. 심심할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홍군 사진 앞에 놓아놓기도 한다.

홍군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고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홍군 아버지도 수능이 끝난 뒤 도심을 돌아다니는 또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 울컥할

고 홍정은군 숨진 지 2달

밤이면 아들 사진 향해 "잘 자"

여전한 트라우마에 심리 치료

업체대표는 "자발적 잠수" 변명만

학생 노동자 인권 강화 서둘러야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홍군 가족들은 홍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심리 치료도 받고 있다. 그리움 뿐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만든 현장실습업체,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괴로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홍군은 지난 10월 6일 이순신마리나 내 계류장에서 요트 탈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지시받고 면허도 없이 스쿠버 잠수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홍군은 2인 1조로 하는 잠수작업의 원칙, 통상 체중의 10% 무게의 납벨트를 착용하

는 기준, 제곱반야아할 스쿠버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홍성기씨는 특히 지난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들이) 자발적으로 잠수를 했다는 업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고 했다.

아버지는 "18살 미성년자가 실습업체 대표가 시켜 스쿠버 장비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은 형량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홍군 아버지는 다음 재판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담은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군 아버지는 "아들은 납 벨트 무게 때문에 차디 찬 바다 밑에서 얼드린 자세로 호흡하다 숨졌다"면서 구조 신고가 빨랐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또 사고난 지 5일 만에 전화를 걸어 '언론·경찰·노동부에 시달려 죽겠다'며 '요트 손님이 많으니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연락한 업체 대표의 행태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홍군의 죽음은 현장실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각각이 쉽지 않다.

교육부·전남도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은 공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10월 9일부터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 여부와 산업체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해 규정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전국 대부분의 현장 실습장도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전국적 실태 파악은 여태껏 진행중이다.

우선,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전화)'를 운영키로 하고 전국 실태 파악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게 고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직업계고 재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애로점,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다.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가 모두 공감하는 안전한 현장실습 실습업체를 확보하고 학생 노동자 인권 강화 등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 청소년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1월 25일 선고 공판

허석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 심리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터넷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출도 '인맥 찬스'라니...

한도 초과해 수억 편법 대출해준 신탁 간부들 징역형 선고

대출한도를 초과해 수억원을 편법 대출해준 영광 모 신탁 간부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인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 대출도 여의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인맥 찬스'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편법 대출 방식에 대한 박탈감도 우려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영광 모 신탁 전무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신탁 본점 지점장 B(40)씨와 주임 C(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탁 대출 규정을 어기고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는가 하면, 동일한 여신 한도를 피하기 위해 실제 대출 이용자가 아닌데도 사용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대출, 신탁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해 1억5000만원 이상 신용대출 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고객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주는가 하면,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줬다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대출금 채권을 결손처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명이 어려워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자들과의 친분과 자신들의 영업 실적을 위해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줬다는 게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이다.

재판부는 "신탁의 대출업무 담당자들로, 신탁법 등을 무시하고 상환능력이나 상환 의사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자의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초과대출자의 경우 채권·채무내역, 담보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벽화 보면서 학교 가세요"

21일 광주 북구 두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담벽의 벽화가 완성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벽화는 두암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성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산단 화재사고' 업체 사과 했지만... 용접·허위 작업허가서 등 입장 안 밝혀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화재사고(광주일보 6월 14일 6면)와 관련, 이일산업이 제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안전조치, 안전교육 준수 여부 등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관련 입장을 댄 사과문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면피성 사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일산업은 21일 '작업중 폭발·화재 사고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일산업은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경히 받아들이고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위반사실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사측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사업장 내 연료저장탱크에 인화성 유기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등 화기 작업을 허가한 이유와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의혹,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일산업이 해당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입장과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 여론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플랜트노동조합 관계자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내놓아야 쉽다"면서 "광주노동청이 실시중인 특별점검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동계를 포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민주노총 광주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만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22년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는 원년이 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p>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p> <p>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 (보2천,월200) 급매가 -> 4억5천</p> <p>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 (보1천,월100) 급매가 -> 2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담(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